

사 랑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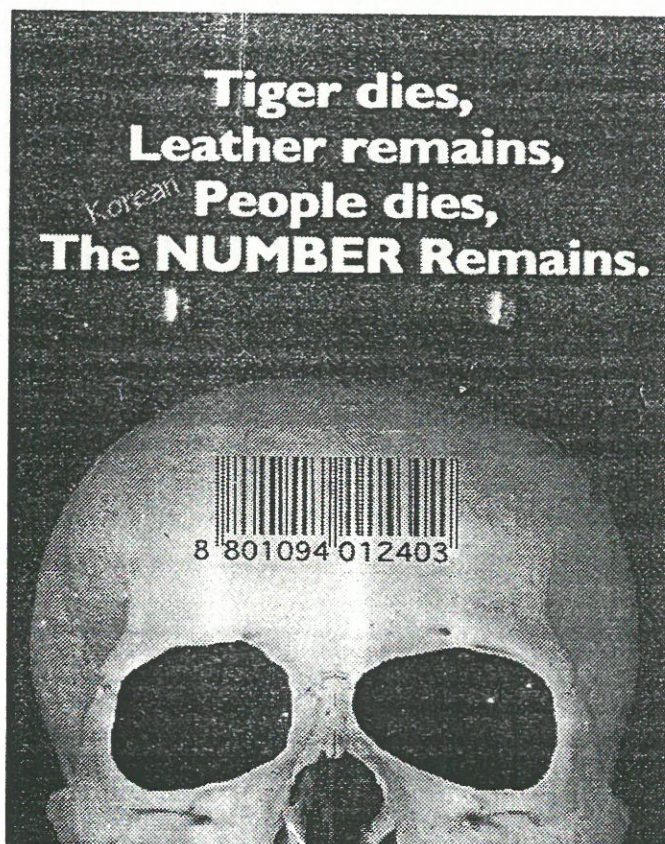
회원통신 제31호(97/7/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한국사람은 죽어서 번호를 남긴다.”



모든 국민을 재고 조사하듯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김기중(자문위원, 변호사)

국가신분증이란 원래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한 부류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스페인의 프랑코정권이나 나찌와 남아공화국 연방에서도 국가신분증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 또는 일정한 인종을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나찌를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국가신분증 자체에 체질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남북대치상황을 핑계로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8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그 수록내용이 확대되고 소지의무가 부과되는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발전된 나라들 중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이웃나라인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그러한 신분증 발급이 강제적이 아니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신분확인 목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한편 국가신분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많기는 하나,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통제장치를 갖춘 특유의 제도이다. 우리의 제도는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유일불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전 국민이 신분증 발급이 강제되고 있으며, 그러한 신분증과 결합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3가지 강제적인 제도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운영됨으로써 전 국민을 단일한 체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전 국민고유번호제, 전 국민 주민등록제, 전 국민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고 고유번호로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이기에 영국은 제2차 대전 중에 전쟁수행 목적 때문에 도입하였던 개인고유번호제도를 폐지하였고 스페인도 프랑코 독재 시절에 도입하였던 고유번호를 폐지하였으며, 최근에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를 선택한 헝가리에서조차도 정부가 도입하려던 개인번호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일련번호로 나열관리하고 주소와 그 이동상황을 강제등록하도록 한 것도 부족하여 정부는 이미 1993년에 이들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현황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 모든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대한 국가컴퓨터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전자주민카드 제도이다.

사실 우리는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붙여진 고유번호가 어떤 명에가 될지 미처 깨닫기 전에 아무런 저항없이 그 속에 목을 밀어넣어 버렸고, 이러한 고유번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각 부문별로 집결되고 분류, 정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제로 무분별하게 분류, 정리, 활용되고 있는 개인 전산기록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제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제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반인간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이 제도부터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몇몇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이 이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수록매체가 바뀐다고 바뀔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주민등록증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제도를 전제로 여러가지 행정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답습한 기업체의 습성때문이지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효용때문은 아닌데다, 그러한 효용은 주민등록제도나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신분증 제도나 주민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시정하지 않고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결국 전자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 이 글은 지난 6월 3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즈음하여'에서 발표한 발제문 중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서 인용했습니다.

사 / 업 / 보 / 고

(97년 6월 셋째주부터 7월 둘째주까지)

인권영화제 발걸음 빨라져

-16일 작품 선정 시사회 가져-

지난 8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서준식 대표(집행위원장) 등 8명의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6일 오후 7시부터 17일까지 이충직(중앙대 영화과 교수), 조광희(변호사), 정재형(동국대 영화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 선정을 위한 시사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18개의 작품을 보고, 1차로 영화제 상영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동국대에서 진행될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 해와 달리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진행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 영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문민정권 하의 인권상황'을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영화 상영 때마다 상영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 이미지전(판화전 등), 콘서트 등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부대행사 중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제작할 비디오 티이프는 통계와 그림, 사진과 인터뷰 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동원하여 15분 내에 현재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재학중인 김지원씨가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영화

제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씨의 빠른 일 솜씨 덕분에 번역 작업이나 외국에 편지 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 완성

-통신 서비스 준비 박차-

인권운동사랑방의 숙원 사업인 데이터베이스가 1차 완성되었습니다. 폭스 프로(FOX FROW)에 입력된 데이터는 기존에 워크시트로 작성된 자료를 다시 업선하여 정리하였고, 따라서 1차로 단행본 1천권과 아티클 4천건이 입력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96년 상반기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입력이 되었고, 그후의 데이터는 최근 자료들로부터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컴퓨터 통신상에 서비스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데 7월 25일까지는 참세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참세상의 메뉴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본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문을 입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스캐너도 없는 상태가 때문에 이후 이를 위한 재정마련과 기술적인 축적이 필요합니다.

금번 데이터베이스 작업에는 <매일노동뉴스>를 발간하는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8호 7월말 발간

인권홍보실은 올해 상반기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 8호 발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합본 8호에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행한 <인권하루소식>을 묶고, 상반기 인권상황을 정리한 글을 신게 됩니다. 발간되는 즉시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은 '안기부와 인권'과 '전자주민증' 기획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안기부 시리즈는 오는 25일 총 9회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계속 관심깊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 실습 8월까지 진행

올해도 예년처럼 사회복지학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실습에는 연세대에서 2명, 성균관대에서 1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7월에 서울신학대에서 3명이 더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의 행정 실수로 8월로 옮겨졌습니다. 8월에는 총 8명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습은 인권에 대한 교육, 현장참관, 업무 보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의 연수도 진행되었습니다. 7월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연수에는 예년과 다르게 4명밖에 참가하지 않아 매우 저조했습니다. 교육내용도 독특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인권의 역사, 개념, 인권현황이나 국제인권제도 등의 것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인권현실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6월 17, 18일에는 영등포여상에서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백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에서 대규모 집단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 고등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연대사업>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 전두환·노태우씨 등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주년을 설정하였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7월 21일 이전까지는 개별 단체별로 전·노 사면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21일 신한국당 경선이 끝난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거리 캠페인, 정치권에 대한 압력, 여론 조성작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가협은 16일부터 거리 캠페인에 돌입하였으며, 민변은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사랑방은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사무국장을 8월 15일까지 다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파견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주민카드공대위: 공대위는 국회 내무위에 7월 14일 전자주민증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회 앞과 신한국당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제주도과 전북지역에 이어 광주에서도 전자주민증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발족되는 등 전자주민증 저지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6,7쪽에 성명서 게재)

<동정>

· 김정희 총무 휴직: 지난 94년부터 사랑방에 근무해왔던 김정희 총무가 6월말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심신이 지친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은아씨 새 총무: 그동안 정보자료실에서 근무했던 최은아씨 총무직을 인계받았습니다. 최은아씨는 자료실 업무를 보조하면서 총무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서준식 대표: 7월 15일부터 1주일간 영화제 관계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한 다음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 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낮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997년 7월 15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박형규) <이상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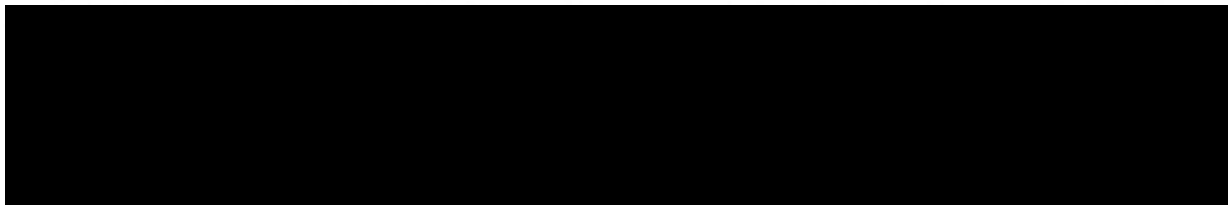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제주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 고충석, 김상근)

97년 6월 재정보고
(97년 6월 16일 - 7월 15일)

전기이월: +296,468원

수 입		지 출	
회비	2,727,500	활동비	3,725,000
구독료	3,558,630	사업비	95,730
사업수익	426,870	발송비	115,500
후원금	1,150,000	사무비품	542,000
은행이자	21,684	사무실유지	713,400
기타수익	295,221	자료구입	186,000
		식대(야근)	242,200
		전화요금	794,046
		사무기기	217,000
		복사비	226,402
		기타	149,190
수입총액:	8,179,905원	지출총액:	7,006,468원
최종결산:	1,469,905원		

<6월 자문 · 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5월 회비 누락자>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 CBS 방송국의 오준석 PD가 선풍기 구입비로 5만원을 보내줘 벽걸이용 선풍기 두대를 설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